



# 중소기업 CEO 경영정보

## CEO Management Information

- 뉴스포커스 : 한·일 FTA체결시 年 30~408억弗 이득 外  
對中 수출 11년새 11배 증가 外
- 스페셜리포트 : 부상하는 아시아 경제, 특징과 전망  
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
- CEO광장 : 국내 CEO 하루 평균 9시간 30분 근무 外  
감원 등 구조조정, 장기적으로 손실 外
- 경제산책 : 『미공개 벤처주식 종합거래시장』개설  
모기지론 제도(Mortgage Loan)

**뉴스포커스**

**□ 한·일 FTA체결시 年 30~408억弗 이득(재경부)**

- 한·일 FTA 효과 분석결과(한국의 경우)
  - 단기적(1~2년) : 공산품 경쟁력 열세로 손해
  - 중장기적(3~10년) : 일본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 자본축적으로 이익
- 양국 경제연구소 전망(한국의 경우, 중장기적)
  - 한국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: 매년 GDP가 2.88% 상승 30억 달러 흑자
  - 일본(아시아경제연구소) : 매년 GDP가 8.67% 상승 408억 달러 흑자

**□ 9월 수출 172억달러 돌파 사상 최대(산자부)**

- 9월중 26억 2,2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
  - 수출 172억 1,500만달러, 수입 145억 9,300만달러
- 수출은 지난 4월(157억달러)의 역대기록보다 15억달러 높은 사상 최고치
  - 무역수지흑자는 98년 12월(37억 7천만달러)이후 57개월 만에 최대

**□ 올 상반기 남북교역 25% 증가(무역협회)**

- 남북교역규모 2억 6,900만달러, 295개사 469개품목
  - 반출은 1억 5,700만달러(32% ↑), 반입은 1억 1,200만달러(17% ↑)
  - 상업매매·위탁가공 53%, 비거래성교역 47%

**□ 2007년까지 120만개 소기업 정보화 실현(정통부)**

- 현재 25%, 75만개에 머물고 있는 50인미만 소기업

의 정보화를 오는 2007년까지 120만개로 확대할 계획  
 - 각종 솔루션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쓰는 ASP(기업정보화 대행서비스)방식을 도입하고 소기업에 전파할 계획

**□ 對中 수출 11년새 11배 증가(KOTRA)**

- 중국으로의 수출이 미국을 앞질러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
  - 對中 수출 의존도 : 17.7%, 對美 수출 의존도 : 17.5%
  - 對中수출 : 231억달러, 對美수출 : 228억달러 (1월~9월 20일누계치)
- 對中수출 급증세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의 결과라기 보다는 對中 직접투자 증가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

**□ 중국행 엑소더스 심각(대한상의)**

- 설문조사(수도권 제조업체 202개)의 47.5%가 이미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며 1~2년 이내 진출예정인 기업도 25.5%에 달함
  - 중국행 이유 : '고임금(66.1%)', '대립적 노사관계(10.3%)' 등
  - 향후 중국시장 재투자 : 부정적 응답(41.7%), 긍정적 응답(34.3%)- 중국 진출업체 20%는 투자실패로 사업철수 경험, 13.7% 철수 예정
  - 철수원인 : 중국시장 사전조사 미흡(40.8%), 업종 선정실패(29.5%), 중국 내수부진(11.1%), 현지파트너와의 불화(9.8%)

**□ 기업투자 관련 세제지원 대책마련 촉구(중소기업계)**

- 정부는 △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 △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△법인세율 현행 유지 등 세제개편안을

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

- 특별세액감면제도 :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의 10~30%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
- \* 중소기업의 56.1%가 동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연간 7,500억원의 법인세(소득세)를 절감
- 임시투자세액공제 :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
- 중소기업계는 경기활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의 현행 유지,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장기연장을 입법화함은 물론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촉구

## 스페셜리포트

### □ 부상하는 아시아 경제, 특징과 전망(FT)

- 2002년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GDP 중 시장가적으로 24%, 구매력환산지수(PPP)로는 1/3, 세계인구의 56%를 차지
- 아시아지역의 4가지 경제특징
  - ① 세계무역에서 亞, 특히 중국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증가
    - 亞太지역이 세계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· 10%(63년) → 18%(83년) → 24%(01년)
    - 中의 비중은 83년 1%에서 01년 4% 이상 증가하여 2010년에 일본추월 전망(日의 비중은 93년 10%에서 01년 7% 미만으로 감소)
  - ②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축자 지역
    - 02년 東亞와 南亞는 2,460억달러 경상축자 실현(IMF 보고서)
  - ③ 외국인직접투자(FDI) 대거 유입
    - 02년까지 亞지역 FDI 유입누적액(1조 3천억달러)은 전체개도국의 56%
  - ④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인구가 크게 감소

- 東亞에서 하루 1달러 미만(PPP환산)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90년 4억 7,000만명에서 00년 2억 6,100만명으로 감소

### □ 아시아 경제의 부상에 따른 경제전망

- ①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에서 노동집약적 공산품 부문은 불리해질 것이나 원자재, 식품 같은 1차적인 생필품의 교역조건은 유리
- ② 세계 금융시장들의 진정한 본원지로 부상
  - 97년 亞국가들은 금융부문을 선진화하지 못한 채 금융산업을 개방·자유화한다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낌
- ③ 인도는 8% 경제성장을 창출에 필요한 변화를 시도할 전망
  - 인도가 고성장할 경우 경제중심이 亞로 급속히 이동

### □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(중기청)

- 중소기업청은 10.28(화) 국무회의을 통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
- 이번 벤처법개정안의 주요내용
  - ①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왔던 M&A 대상을 다른 법인(상장·등록법인 포함)의 주요 주주까지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M&A 저변을 확대
  - ② 관련 법규정이 없어 일시 금융차입을 통해 편법·우회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를 도입
    - 일시 금융차입 없이도 공인평가기관(기술거래소 등)의 평가를 통해 신주-구주 교환 가능
    -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를 법원의 현물출자 심사로 대체하여, 개인의 시세차익 등 투기목적의 M&A를 방지
  - ③ M&A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

합병시 현행 주총 전후로 2번하는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주총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소규모 영업양수도시에는 주총절차를 생략

- M&A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'주식매수청구권' 부여, '주식교환 무효의 소 제도' 도입 등 다양한 권리보호장치를 마련

○ 벤처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

- ①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 합병, 이업종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
- ② 신주발행에 의한 현물출자 인정 등으로 종전 음성적·편법적 M&A가 제도화됨으로써 그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M&A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
- ③ 공인평가제도 도입, M&A관련 세제지원 등 체계적인 M&A 인프라가 구축

**CEO광장**

□ 국내 CEO 하루 평균 9시간 30분 근무(현대경영)

- '100대기업 CEO의 라이프스타일' 조사결과
  - 회의시간(일평균): 2시간 36분
  - 컴퓨터 이용시간(일평균): 1시간 56분
  - 독서량(달평균): 4권
  - 해외출장(연간): 8~9회
- CEO들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
  - 지난해(10시간 40분) 보다 1시간 정도 감소

■ 월요일엔 주가 변동성 매우 커(최창규 명지대교수)

- 95년 1월부터 03년 5월까지 9년간 국내 주가(종합지수, 코스닥지수)와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, 주말동안 누적된 정보가 쏟아지는 월요일에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국내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군집현상을 보이면서 외국인 거래비중이 높을수록

주 변동성이 컸음

-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늘어날수록 각종 충격이 완화돼 주가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일반적 통설과는 반대되는 현상임

- 뉴스충격과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 보다는 나쁜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하며 인터넷거래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가변동성은 작았음

□ 기업 절반이 사외이사 1명뿐(상장사협의회)

- 거래소 상장·코스닥 등록법인 1,166개사 중 568개 기업(48.7%)의 사외이사가 단 한명에 불과
  - 사외이사가 2명인 기업은 398개사(34.1%)로 1~2명의 사외이사만을 둔 기업이 전체의 80%를 초과

□ 감원 등 구조조정, 장기적으로 손실(삼성경제연구소)

-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것은 종업원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
- 퇴직, 재배치, 교육, 아웃소싱 등의 인력효율화 방안을 광범위하게 동원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력구조조정을 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

□ 국내 CEO, 파워리더십 중시(월간 CEO)

- 국내 100대기업 CEO들은 파워리더십(27%)과 사이드 리더십(25%)을 소유한 CEO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
  - 파워리더십: 성실과 끈기를 기반으로 솔선수범해 말보다는 강력한 행동이 앞서는 유형
  - 사이드리더십: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강조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유형

## □ 한국 CEO연봉, 20만달러로 아시아 최하위권(HRBS)

- 지난 7월 아시아 13개국에 소재한 373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EO 연봉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60만달러로 가장 높았음
  - 홍콩(43만달러), 호주(37만달러), 중국(34만달러)이 각각 2, 3, 4위를 차지
  - 한국은 20만달러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

## ● 경제산책

### □ 『미공개 벤처주식 종합거래시장』개설

- 중기청은 최근 벤처캐피탈·은행·보험 등이 보유한 미공개 벤처주식과 채권을 온라인상에서 사고 팔수 있는 종합거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힘
- 종합거래시장은 투자기관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각 기관별로 보유한 주식과 채권을 D/B에 등록하고 경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
- 거래시장 참여대상은 기관투자자들로서 거래대상은 기관이 보유한 미공개 주식·채권(CB, BW) 등에 한정

### □ 모기지론 제도(Mortgage Loan)

- 모기지론제도는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(MBS)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지칭
-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,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(보통 20년 이상, 고정금리)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20~30%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

-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의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
## ● 중앙회 조사관련 최근 주요활동

- 중소기업 세제·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(10.7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금융세제부 ☎ 02)2124-3193
-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보고서 발간(10.7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금융세제부 ☎ 02)2124-3191
- 중소기업창업 생존전략에 관한 CEO 의견조사(10.6)
  - 담당부서: 산업조사처 조사통계부 ☎ 02)2124-3209
- 신용대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실태조사(10.2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금융세제부 ☎ 02)2124-3192
- 2003년 3/4분기 판매대금결제상황 조사(10.2)
  - 담당부서: 산업조사처 조사통계부 ☎ 02)2124-3203
- 중소기업 활력회복 정책과제 건의(10.30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정책총괄부 ☎ 02)2124-3173
- 중소기업금융지원점검단 개최(10.30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금융세제부 ☎ 02)2124-3191
- 벤처지원포럼(차세대성장동력 산업에서의 중소·벤처기업 역할) 개최(10.30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소기업지원부 ☎ 02)2124-3181
-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(10.30)
  - 담당부서: 경제조사처 금융세제부 ☎ 02)2124-3192